

제 2 차 일북정상회담 10 주년에 임하는 후루야 납치문제담당대신 담화

2014 년 5 월 22 일

평양에서 제 2 차 일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10 주년이 되는 오늘, 납치문제담당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 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납치피해자 여러분들의 귀국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담당대신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에서 가혹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아직도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여러분들, 그리고 귀국을 계속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북한이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작년 5 월 22 일에 제가 제 2 차 일북정상회담 9 주년을 맞이해 발표한 담화 이후, 적십자회담을 포함한 일련의 일북간의 협의, 요코타 씨 부부와 손녀인 김은경 씨의 만남 등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활동 및 보고서를 통해 납치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1. 제 2 차 일북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일북실무자협약에서 제시된 「재조사결과」는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가 없을 뿐더러 부자연스러운 점과 모순으로 가득찬 것이었습니다. 일본측 입장에서는 이것을 최종적인 답변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2.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 없이는 어떠한 인도적 지원, 제재에 대한 해제도 없습니다. 동시에 문제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북한측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일본측도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한 조치 외에 일본이 독자적으로 취하고 있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을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3. 일본은 생사불명의 납치피해자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일관되게 강화해

왔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시간을 번다고 해도 상황 개선이나 실리 획득에까지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납치피해자의 존재를 은폐하는 것으로 납치문제의 종식을 피한다면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가족들에게 「사망」을 납득시키거나 관계자들을 이간시키는 등, 문제를 흐리려는 시도도 일체 통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책동으로 납치피해자의 무사귀국을 촉구하는 일본국민의 목소리를 수습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유지해가며, 일조(日朝)평양선언을 바탕으로 납치·핵·미사일이라는 제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일북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여 일북국교정상화의 실현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납치문제는 아베내각에서 해결하겠다. 피해자가 가족들과 다시 만나 서로 보듬어 안는 날까지 내 사명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아베총리와 함께, 저도 최후의 담당대신이 되겠다는 결의 아래 납치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역사적·대국적 견지에서 일조평양선언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납치피해자 전원의 귀환을 실현하는 바른 결단을 내려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하며 구체적인 논의에 응할 것을 북한지도부에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은 존엄성을 가지고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의 융화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